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김 형 국*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대통령 후보별 득표율과 후보자 연 |
| 2. 선거지리학의 이론적 수준과
한국의 선거지리학 | 고지역 및 연고지역별 인구와의
상관관계 |
| 3. 지역주의와 제13대 대통령 선거 | 5. 맺는말 |

1. 머리말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는 지역감정이 투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선거였다. 영호남간의 대립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감정은 지난 1960년대 초 이래 누적되어 온 발전의 지역격차와도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제13대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에 나타난 여야후보의 득표상황을 선거지리학적인 시각에서 지도화하고, 또 득표상황을 대통령후보들의 연고지역인구같은 사회변수와 연계를, 설명함으로써 향차 국토개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국토 또는 지역의 문제를 투표행태를 기준으로 삼아 지정학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연구작업이 널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통령선거제가 간선제가 되고 부터 한동안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인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제13대 대통령선거는 제7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지난 1971년이래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종합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초의 중대 사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통령선거의 투표행태를 국민들이 국가발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걸 평가하는 기회라 전제한다. 이 전제대로 국가발전의 외형적, 통계적 자료에 못지 않게 투표결과는 국민들의 마음에 지난 한 세대의 유례없는 경제성장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중요한 상징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투표에 비친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평가는 물량적, 총량적 국가발전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 정책지표인 것이다.

이 연구의 중요내용은 (1) 대통령후보들의 유효득표율을 고급통계의 방법을 빌어 국토상에다 지도화하고, (2) 지도에 나타난 여야후보별 유효득표율을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지역별 출신 인구구성같은 변수와 연계시켜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 (3)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장차의 국가발전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위의 연구내용 (1)을 위해서는 단위장소별 투표율을 정밀하게 직선, 변곡선 등의 형태로 등고선으로 그릴 수 있는 경향면분석(trend surface analysis)을 시도하고, (2)를 위해서는 투표율과 후보자 연고지역 인구변수와의 상관성을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하며, (3)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발전 또는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다는 정성적 서술방법(verbal qualitative statement)을 시도한다.

2. 선거지리학의 이론적 수준과 한국의 선거지리학

가. 선거지리학 : 정치지리학의 분파학문

정치지리학은 정치현상의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 분야는 “대체로 파라다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채 관심 주제에 대해 사고방식을 정리하는 수준”(Kliot, 1982)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이 분야의 연구는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지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정치가 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선거지리학(electoral geography)은 정치지리학의 분파연구이다. 1970년대 후반에 급속한 진전을 보인 연구분야로서 선거의 정치적 과정 등에 관심을 경주한다. 응용연구분야이면서 동시에 선거구의 재획정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가 등과 협조가 필요한 실무분야이기도 하다(Kliot, 1982).

투표의 공간적 유형에 대해 분석의 역점을 두는 선거지리학은 어떤 면에서 총체적 특성을 가진 지리학이라 할 수 있다(Klimasewski, 1973). 정치가 온갖 사회현상을 망라하는 개념인 점에서 그렇다.

이 학문의 관심은 두가지다. 하나는 투표의 공간적 분포 현상을 기술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제도법(cartography)과 계량적 기법을 이용해서 시공상에다 선거결과를 풀이한다. 둘째는 무슨 이유때문에 그런 투표의 공간적 유형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한다. 득표율을 등고선의 모습으로 단순화시켜 지표상에 나타내서 투표경향을 확인하는 것은 전자의 관심이고, 미국의 경우에서 밝혀진대로 국회의원 투표의 공간적 유형은 소득과 흑인인구의 비중과 같은 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은 후자의 관심이다.

또 전자는 투표행위의 기술적(descriptive) 확인인데 견주어 후자는 설명적(explanatory)

접근이다. 이 글이 관심을 경주하는 분야도 후자의 것이다.

후자의 관심에 따라 밝혀진 투표형태에서의 공간구조적 효과(spatial structural effect)에는 이를테면, ‘파손효과’(breakage effect)가 있다. 어느 지방에서 우세한 정당이 있을 경우, 계층적 요인이나 다른 요인의 작용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연고가 지지의 바탕이 되는 효과를 뜻한다. 이는 마치 투표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는 공간적 연계나 사회, 정치적 유대를 갖지 않는 것처럼 보아온 종래의 연구시각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Rumley, 1981).

미국의 경우, 투표에 나타난 공간구조적 효과를 (1) 정당활동, (2)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3)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Putnam, 1966)가 있다. 여기서 마지막의 요인이 의미있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개인의 ‘접촉공간’은 새로운 자극과 상징에 노출되고 있고, 그만큼 투표행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Cox(1970)의 가설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된 것이다.

나. 한국의 선거지리학 연구

선거지리학이 정치지리학의 한 분야라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선거에 비취진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정치학이 앞서 다루어온 분야이다. 정치학분야가 시도했던 투표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지역은 야당을, 농촌지역은 여당을 지지해왔다는 뜻의 ‘여촌야도’란 개념이 대표적이다.

여촌야도란 시부지역은 야당이 우세하고 군부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당이 우세하다는 투표 통계의 과거경험에 대한 피상적인 관찰에서 도출된 특성인데 정치학의 전문연구는 여기에 심도를 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주의식과 투표행위에 대한 태도에 대한 도시거주자와 농촌거주자와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농촌거주자보다는 도시거주자가 더 높은 정치의식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투표행위의 효능감에 있어서는 성별과 교육수준을 제외하고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농촌거주자 보다는 도시거주자가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길승흠 등, 1987: 275).

‘여촌야도’는 공간개념으로 본 지리와 투표와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것이라면, ‘표의 동서현상’ 같은 지적은 장소개념으로 본 지리와 투표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것이다. “우리 나라 선거행태로서 지역주의적 성향이 지적되고 있다. 즉 한국유권자의 투표는 그 결정기준을 지역적인 면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1971년 선거에서 영남을 비롯하여 강원, 충북, 제주, 부산 등 동쪽지역에서 박정희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고, 호남, 경기, 서울 등 서쪽에서는 김대중후보가 더 우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표의 동서현상은 단순한 지역의 식 이외에 정부의 정책개발에 의한 혜택여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고 있다”(길승흠 등, 1987: 91-92).

선거양상의 정치학적 접근에 견준다면 선거지리학의 연구는 투표와 지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런데 투표행태를 장소 또는 지역과 연계시킨 선거 지리학적 연구는 국내의 경우, 한둘 손꼽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먼저 제도법(cartography) 또는 계량적 제도기법을 이용해서 시공상에다 선거결과를 풀이한 연구(Kim, 1974)가 있다. 대통령선거의 득표결과를 지도에 나타낸 뒤 이를 지역격차에 연계시켜 국토개발의 문제점을 논의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제 5대(1963년), 제 6대(1967년), 제 7대(1971년)의 3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대통령 당선자의 지역별 득표율을 분석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를테면 1971년의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야당후보는 제각기 출신 고향에서 등고선의 정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또, 대통령 당선자의 유효득표율이 지리적으로 1963년 이래 현저하게 분극화되고 있음을, 다시말해 최고득표지역과 최저득표지역간의 득표율 차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는데 이진 발전의 지역격차 심화와 관련된 것이라 지적한다(김형국, 1983).

위의 연구가 통계기법을 이용해서 투표경향의 장소적 특성을 도면화한 것이라면 투표율의 지역적 분포는 어떤 이유가 작용한 결과인가를 규명한 연구(Kim and Koh, 1972)가 있다. 이 연구는 Kim(1974)이 다룬바 있는 3대 대통령 선거(1963년, 1967년, 1971년) 그리고 1971년의 국회의원선거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도시화 요인과 지역주의적 요인이 투표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한다. 독립변수인 도시화요인은 도시적 합리성을 상징하고, 지역주의적 요인은 지역출신 후보자에 대한 연고 지역민의 지지라는 감정적 요인을 상징한다. 연구의 결과는 1971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지향적 성향은 보이지 않고 후보자와의 지역적 연고가 확인되는 데, 이는 영남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증대와 강력한 지역연고를 가진 야당후보의 등장으로 지역적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라 분석한다.

또한 1963년와 1971년의 대통령선거의 양상이 대조적임을 지적한다. 곧, “1963년의 대통령 선거는 야당의 윤후보를 지지한 지역은 가장 도시화된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적 요인과 도시화적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했다.” 하지만 “1971년선거에서는 김대중을 지지한 지역은 덜 도시화된 지역—여촌야도라는 전통유형대로라면 여당후보를 지지했어야 했다—이었고 그런 점에서 지역적 요인과 도시화요인은—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따로따로였다. 통계를 종합하면 지역적 요인과 도시화 요인이 독자적으로 예민하게 작용한 셈이다.”

이 대조되는 양상을 두고 이런 해석을 추가하고 있다. “투표자의 비성숙이라면서 지역주의를 개탄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필자들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당정치역사가 짧고 경쟁하는 당끼리 특별한 이념이나 정책이슈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투표자들이 고향 출신후보자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 본다. 동질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지역적 자부심과 귀속의식은 중앙집권적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대중의 전체적 동원가능성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가 된다고 본다”(Kim and Koh, 1972 : 853-854).

한편, 김성준(1988)은 선거지리학의 이론수준과 이 분야의 우리 나라의 수준에 대해 소개한 뒤, 총 12회의 국회의원 선거중에서 제 8대(1971), 제10대(1978), 제12대(1985) 선거의 결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투표결과와 통계적 도면작업에다 시군지역을 단위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유권자의 연령별 인구구성비, 성비, 교육수준 및 도시화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연구방법에서 경향면분석(trend surface analysis)의 도입은 Kim(1974)을, 그리고 고급통계분석(chi-square analysis)의 이용은 Kim and Koh(1972)의 연구를 연상시킨다. 연구내용은 여촌야도현상의 규명과 지역주의적 성향에 대한 논의이다. 연구결과는 “여당은 도시로 갈수록 득표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야당은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득표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곧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여당보다는 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촌야도’현상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바로 투표의 ‘도시화효과’인 것이다.

그리고 도시화의 ‘인접효과’(neighborhood effect)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거에 따라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도시주변의 군지역이 도시로 부터 격리된 군보다 여당에 대한 지지가 낮으므로 도시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도시주변의 군지역의 정당지지 성향도 도시화되어 간다.”

3. 지역주의(regionalism)와 제13대 대통령선거

가. 투표에 비친 지역주의

1987년 12월, 16년만에 실시된 직선제 대통령선거는 우리의 현대사가 민주화의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한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선거양상은 민주화가 상징하는 근대화의 의미를 배반한 채 이른바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사건이기도 했다.

제13대 대통령선거가 지역감정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그 선거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전국 유권자 1961명을 면담한 조사 결과⁽¹⁾가 대통령선거 투표에 나타난 지역감정의 강도를 말해 주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타락선거라는 국민의 인식이 팽배했는데 타락성의 내용에는 <지역감정조장>도 들어 있었다. 지역감정조장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아주 심했다>가 53.7%, <심한 편이다>가 36.0%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지역감정조장이 심했다고 응답했다.

지역감정은 구체적으로 출신지역 후보자에 대한 높은 지지로 구체화되었다. 대통령 후보의 선택기준으로 “후보자의 출신지역이 투표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45.0%,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이 34.1%로 드러나 응답자 5명 중 4명(79.1%)은 후보자의 출신지역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1) 동아일보 1988년 1월 22일자.

학력, 성별, 직업 그리고 지역 등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감정의 강도를 말해 주는 출신지역 인사에 대한 지지강도는 전라도출신 후보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두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확인된다. 첫째, <귀하는 오늘 투표한 후보를 언제쯤 찍겠다고 결심했습니까>라는 물음에서 “김대중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은 비교적 일찍 마음을 정해, 초기인 선거공고일 무렵에 이미 61.5%가 결정을 내린데 비해 같은 시기에 김영삼후보 지지자는 47.6%, 노태우후보 지지자는 46.4% 밖에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한다.

둘째, 마음속으로 결정했던 후보와 실제로 투표한 후보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처음 결정한 후보와 <같다>고 대답했으며 14.9%만이 <같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유권자들은 대부분 한번 결정한 후보자를 중도에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후보자별로 살펴보면 김대중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90.5%가 처음 찍으려 했던 후보와 <같다>고 응답한 반면 김영삼후보 지지자는 84.9%, 노태우 후보지지자는 81.0%가 <같다>고 답했다. 김대중후보가 고정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 지역주의의 실태

위에서 지적했듯이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역적 연고가 투표자의 투표행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이 지역적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본능적이라 한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태적 특징의 하나로 영토성(territoriality)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Malmberg, 1980).

영토성이 바탕에 깔린 지역주의는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 또는 인격형성기를 보낸 장소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을 일컫는다. 지역주의(regionalism)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될 때는 지역의식, 지역갈등, 지역감정, 지역차별, 지역격차 등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지역감정은 심리학에서 집단갈등이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지역감정이란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된 여타지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속성의 심리형태” 또는 “지역감정 연고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집단적대감”이라 정의한다(김진국, 1988).

우리 나라 지역감정의 실상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한다. 첫째, 지역감정은 남한땅의 경우 지역적 응집력이 있는 호남, 영남, 기호, 충청지역간에 교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감정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영호남간의 지역감정 문제만이 우리 나라 지역주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둘째, 지역감정은 그러나 전라도를 중심축으로 생겨나고 있음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충청도출신(부모도 충청도출신), 전라도출신(부모도 전라도출신), 경상도출신(부모도 경상도출신), 서울출신(부모도 서울출신), 서울출신—전라도부모, 서울출신—경상도 부모 등 6

개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연구(김혜숙, 1988)는 “전라도 대상에 대해서는 전라응답자와 서울—전라부모 응답자를 제외한 전응답자가 모두 타 대상에 대해서 보다 덜 좋아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이런 해석(김진국, 1988)을 시도한다. “흔히 언급되는 영호남 간의 지역 감정이란 전체중 부분적인 현상만을 지칭할 뿐이며……지역감정의 존재 양식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라는 측면에서 영호남 간의 문제가 아니라 호남과 나머지 지역간의 문제일 것이다.”

셋째, 지역편견은 세대간에 교육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위에 인용한 연구가 그걸 밝히고 있다. “서울—전라부모 응답자들은 서울과 전라 대상 둘 다에 대해 다른 대상지역민보다 더 선호하였고, 한편 서울—영남부모 응답자들도 영남사람들과 서울사람들을 다 선호하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호남인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보다 일반적인 것이며, 영호남간의 대립적 태도가 2세대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준다”(김혜숙, 1988).

넷째, 그런데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라도사람의 지역감정은 현실적인 차별에 근거한 반면 영남사람의 지역감정은 호남사람의 성격 및 행동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다”(김진국, 1988).

다섯째, 지역개발에 불균형, 인사정책의 불공정 등의 지역격차는 지역감정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지역감정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차별보다는 사회적 차별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남사람들이 경험한 또는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차별은 거의 보편적이다. 한편 인사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소외에서 오는 개인적인 손실이나 불이익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오는 손실이나 불이익에 비하면 간접적이다.⁽²⁾ 호남사람이 불만의 이유로 정책적 차별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불만의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이고 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김진국, 1988).

지역감정은 삼국시대로 소급되는 역사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통설로 되어 있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의 우리 사회에 폭발하고 있는 지역감정은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사회변화, 곧 지역간의 인구 이동의 급격성(suddenness)와

(2) “이 사실을 지지해 주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간접적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 바 그것은 충청도나 강원도 사람들의 정책적 소외에 대한 반응이다. 이들은 ‘무대점’론에 대응해 ‘무대점’론을 전개하며 호남사람의 부당함을 지적하려하고 이들의 ‘무대점’론 역시 상당한 설득력이 있음을 많은 통계자료들이 뒷받침해 준다. 정책적 소외를 받는 두 집단(호남과 충청 및 강원)이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유력한 잠재적 설명은 사회적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충청도나 강원도 사람은 행위자의 위치에 있고 호남사람은 대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진국(1988).

과격성(radicalness)에서 연원을 찾고 있는 한 연구(송복, 1988)는 지역감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개발시책이나 정부 주요 부문 인재등용의 차등같은 오늘의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적 과제>임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게 한국사회의 지역감정, 지역갈등의 주된 요인이라 보긴 어렵다고 전제한다. 오히려 급속한 인구이동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지역간 인구이동의 결과, 이동인구가 새로 삶의 자리를 마련한 행선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는 증가하고 그래서 사회관계수가 지수상승적으로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접촉당사자들 사이의 의식의 개방속도는 거기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불신통조가 만연하면서 인간평가의 집단범주화 현상(group categorization)의 초래와 촉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역감정이라는 것이다. 곧, “지역감정, 지역갈등의 문제는 결국 사람들이 이치럼 자기의 정체와 남의 정체를 자기나 다른 개인에게서 찾지 않고 지역집단에서 찾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지역감정이 전라도 대 여타지역으로 대표되는 것은 “타지역으로의 지역이동이 가장 격심한 지역이 전라지역이고, 그 다음이 충청지역이며 경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경상지역민에 대해서 한결같이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이 부산과 대구 등의 산업지대에서 지역이동의 물결을 막아줌으로써 다른 지역민 보다 이동의 급격성과 과격성이 덜 일어났다는 데 오로지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부연한다.

지역이동의 급격성과 과격성때문에 생겨난 인간관계의 불신화, 이게 파급시키는 인간평가의 지역적 범주화는 촉발요인에 의해 지역갈등이 고조된다 한다. 그 촉발요인의 대표가 바로 정치인의 정치행위이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지지기반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하여 내집단구성원에게는 차별적으로 행동할 것을 추구하고, 외집단구성원에게는 차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역설했다.” 다시말해 지역감정이 정치인들의 전근대적인 행태에 의해 이른바 ‘확대재생산과정’(김진국, 1988)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4. 대통령후보별 득표율과 후보자 연고지역 및 연고지역별 인구와의 상관관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지역감정으로 크게 물들었다는 사실은 세론과 전문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대통령후보별 득표율은 연고가 있는 지역의 출신인구와 밀접히 상관되어 있음을 뜻한다.

대통령후보별 득표율을 지역과 지역별 출신인구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지역연구의 통

상적인 접근방법이다. 지역연구는 지역의 발전을 지역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그건 지역의 발전이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발전으로 자동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어떤 지역이 낙후 지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잘 사는 사회계층이 있다는 점에서 사람의 번영과 장소의 번영은 다른 것이다.

투표행위의 경우도 그렇다. 전라도는 김대중후보 지지 일색인 점에서 전라도 장소의 지지와 전라도 사람의 지지와 거의 일치하지만 거기에도 노태우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근소하나마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그만큼 장소의 지지경향과 그 장소안의 사람의 지지경향은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연고지역과 연고지역 인구의 지지경향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지역적 지지경향을 경향분석을 통해, 그리고 지역인구의 지지경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기술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가. 대통령후보자별 득표율의 경향면분석

경향면분석은 일종의 통계학적 제도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을 이용하면 유효득표율같은 수치를 지도상에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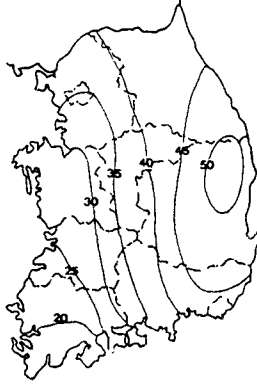
후보자들의 유효득표율은 61개 도시별로 집계한 것이다. 등고선 작성의 기준점을 전국도시로 한정된 것은 여촌야도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투표행태를 미루어 볼 때 전국적 현상을 도시로만 살펴봄으로써 여촌(與村)과 야도(野都)의 차이같은 투표의 변이적 요소를 그만큼 줄일수 있고, 그럼에도 61개 도시의 지점들은 대체로 국토의 지표를 균질적으로 대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경향면분석은 후보자별 전국 평균 유효득표율의 근사치로—노태우후보는 35%,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는 30%, 그리고 김종필후보는 10%로 잡았다. 실제 득표율은 35.9%, 27.5%, 26.5%, 8%의 순서이다—기준치를 잡았고 등고선간의 간격은 5%로 했다. 도면은 <3차 경향면>이 이 연구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개의 변곡점을 가진 3차 경향면은 복잡한 사태를 비교적 능률적이고 간명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라 믿어진다.

경향면분석의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을 풀이하면 먼저 노태우후보의 경우, 전국평균 득표율 35%를 시사하는 등고선은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경계선 우측을 따라 엇비슷한 남북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면상의 최고득표 등고선은 경상북도안에 자리 잡고 있음은 그의 연고지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김대중후보의 경우, 노태우후보가 전국평균 득표율 이하의 득표를 보인 그 지역 곧 전라남북도과 충청남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태우후보와 지지지역을 남북축으로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바로 영—호남간 지역감정이 대변하는 갈등의 동서 양극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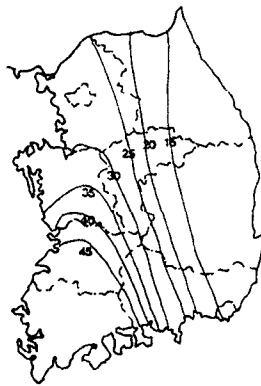
가. 노태우 후보



나. 김영삼 후보



다. 김대중 후보



라. 김종필 후보



그림 1 : 대통령 후보자별 유효득표율의 경향면

김영삼후보의 경우는 노태우후보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게 평균 이상의 지지지역이 국토의 중앙에서 남북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후보와 다른 점은 남북축이 김후보의 경우, 보다 동해안쪽으로 옮겨져 있고, 그 지지기반의 중심은 부산과 경상남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김종필후보의 경우는 경기도 일부, 충청남북도 일원이 그의 지지기반이다. 핵심지역은 변산반도를 중심으로한 충청남도이다. 그의 지지축은 대체로 동서로 전개되고 있는데 전국 유효득표율의 9할을 차지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후보의 지지축이 남북으로 전개된 것에 견준다면 하나의 변이요소 또는 파란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나. 대통령후보자별 득표율의 회귀분석

제13대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를 배출한 지역은 해당 지역출신 후보자에 대해 높은 지지를

나타났었다. 출신지역에 대한 강한 귀속의식(sense of belongingness)이 지역의식인데 이는 곧장 내집단 선호와 동시에 의집단 배타로 나타나면서 지역감정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지역감정은 전통적으로 해당지역에 살아 오고 있는 사람에서 고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뒤에도 고향지역에서 익혔던 지역감정이 세대간에 교육되고 있다. 세대간의 교육도 지역감정의 악화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를테면 “같은 직장의 동료로 고용하겠다”는 항목에서 전라도(현지거주) 사람은 경상도 사람에 대해 0.81- 찬성은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이다-인데 전라도 부모를 둔 서울출신은 0.68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상도사람은 전라도사람에 대해 0.48인데 경상도 부모를 둔 서울출신은 역시 0.44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대간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수치들이다(김혜숙, 1988).

회귀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후보자들의 유효득표율이며, 독립변수는 최신 인구조사통계가 있었던 1985년 11월 1일 현재, 사례지역에 살고 있는 후보자 연고지역 출신인구에 대한 두 변수-출신시기를 출생때로 소급하는 ‘출생지 인구’ 변수와 5년전으로 소급하는 ‘5년 전 거주지’ 변수⁽³⁾-이다. 분석의 사례지역은 특별 및 직할 4개시와 9개도의 시부와 군부 18개로 모두 22개 지역이다. 대통령선거 당시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된 뒤이나 인구조사통계는 1985년의 조사이기 때문에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전라남도 시부통계에 포함시켰다.

후보자의 연고지역 출신인구가 연고지역 출신후보자의 지지 정도를 확인하는 이 연구에서 연고지역 출신 인구수는 사례지역별로 백분율로서 표준화시켰다. 후보자별 연고지역은⁽⁴⁾

(3) 인구조사통계(1985)에 포함된 인구가동통계는 출생지별, 5년전거주지, 1년전거주지로 나누어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생지는 “호적에 기재된 출생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태어난 곳”을 말한다. ‘5년전 거주지’는 “5세이상인 사람에게 대하여 5년전(1980. 11. 1)에 거주하였던 곳”을 말한다.

(4) 연고지역의 확인은 대통령선거직후 지역별 투표성향에 대한 언론의 분석(“표가 말하는 2천3백만의 민의”, 조선일보, 87. 12. 19일자)을 참고했다.

노태우후보의 연고지의 투표성향은 이러했다. 대구는 “두 김씨의 후보단일화 실패에 대한 실망과 노후보에 대한 지역연고의식이 결친데다, 광주, 전주 등지에서의 유세장 폭력사태가 안정을 바라는 이곳 중소기업인들을 불안케했고, 지역감정에 따른 반작용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인 것 같다.” 경북은 “이곳에서의 노후보 압승 역시 지역감정의 소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김대중후보가 충남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화당 김종필후보에게 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김영삼후보의 연고지 투표성향은 이러했다. 부산은 “김영삼후보가 55.1%를 얻어 아성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부산이 김영삼후보의 실질적인 연고지라는 점에서 당초 65%이상의 지지표를 기대했던 민주당측은 노후보가 대구에서 69.7%, 김대중후보가 광주에서 93.4%를 얻은 점과 견주어 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광주, 대구에 비해 훨씬 대도시인 부산의 경우, 우선 토박이 인구가 35% 밖에 되지 않는 데다, 6·25이후 물러살던 혼성도시라 타도시와는 성격부터 다르다는 것. 대구에서 2% 밖에 얻지 못한 김대중후보가 그대도 부산에서 9%를 얻은 것은 부산의 이같은 도시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후보가 김영삼후보의 연고지에서 31.6%를 획득한 것은 같은 <영남>출신이라 큰 저항감이 없는데다 여권조직표와 노후보의 부산지역개발공약 등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

노태우후보가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의 시부 및 군부, 김영삼후보는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의 시부 및 군부, 김대중후보는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시부 및 군부, 김종필후보는 충청남도의 시부 및 군부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모두 99퍼센트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태우 후보의 경우 ‘출생지’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5년전 거주지’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관관계의 정도⁽⁵⁾는 ‘중위상관’($r=0.644$)이다.

김영삼후보의 유효특표율은 두 독립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회귀계수 b 와 표준화 계수 β 로 보아 ‘5년전 거주지’ 변수가 보다 중요하게 상관되어 있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고상관’($r=0.747$)이다.

김대중후보의 유효특표율은 김영삼후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독립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후보의 경우는 ‘출생지’ 변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극고상관’($r=0.962$)이다.

김종필후보의 경우는 노태우후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생지’ 변수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대신 ‘5년전 거주지’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역시 ‘극고

경남은 “이지역 거제군 출신인 김영삼후보가 50.2%를 획득한데 비해 노후보가 40.4%나 얻어 노후보가 <일반예상> 보다는 많은 득표를 올린 지역이다. 이같은 결과의 기본적 배경에는 경남의 북부지역이 부산보다는 대구쪽의 생활권이라는 점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후보의 연고지역 투표성향은 이러했다. 광주 “김대중후보가 93.4%로 전국 최다득표로 압승했다. …광주에서 김대중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록이라는 평들.” 전북이 “김대중후보에게 80.9%의 높은 지지를 보낸 것도 광주-전남과 같은 호남지역이라는 연대의식 때문이라는 것이 이곳 관측통의 분석.” 전남은 “김대중후보가 87.9%로 압승한 반면 노태우후보는 이지역 2위가 됐으면서도, 8.0%에 그치는 참패를 기록했다.”

김종필후보의 연고지역 투표성향은 이러했다. 충북은 “충남출신의 김종필후보가 김대중후보를 누른 것은 이 지역의 호남에 대한 배타성에 힘입은 것이긴 하나, 그 차의 근소함은 같은 충청도라 하더라도 남북간에는 큰 연대감이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 듯.” 충남은 “이 지역에서 김중필후보가 43.8%의 대승…김중필후보가 당시의 전국적 여론조사 결과로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지민들도 놀랄정도의 표를 준 것은 역시 지역감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듯…유세장 폭력 등이 빈발하는 등 영호남지역감정이 격화되자 <이나라에 자기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본때를 보여 주자>며 사표가 될 것을 각오하고 JP에게 표를 찍었다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이 충남전체의 투표경향이었던대면 대전의 경우는 …김중필후보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이는 결국 대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실향민, 영-호남표가 타후보들의 득표로 상당히 연결됐고…”

인구가 밀집된 기호지역의 투표성향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김대중후보는 조직력에서 김영삼후보 보다 앞섰을 뿐 아니라 이지역 호남출신 등 고정표가 누구보다 확고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들. 그리고 경기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후보가 앞섰고, 김대중 후보는 몇 개지역을 빼고는 김영삼후보에게도 상당히 뒤처졌다. …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과 함께 호남쪽의 김후보에 대한 절대지지현상이 오히려 이곳의 배타성을 자극했으리라는 해석도 가능할 듯…그러면서도 서민성과 지역연고에 따른 편차도 엿보인다. 성남과 광명시는 두 곳에서 근소하지만 김대중후보가 노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고, 근로자층이 많은 부천-안산시 두곳에서는 김대중후보가 1위의 노후보에 바짝 접근한 것이다. 젊은 아파트주민이 많은 과천시에선 김영삼후보가 유일하게 선두. 이는 중산층의식을 가진 유권층의 지향점을 말해준다는 분석들.”

(5) 상관계수가 0.2이하는 ‘미소상관’, 0.2~0.4이면 ‘저상관’, 0.4~0.7이면 ‘중위상관’, 0.7~0.9이면 ‘고상관’ 그리고 0.9~1.0이면 ‘극고상관’이다. 김광웅(조사방법론, 박영사, 1976) 참조.

상관' ($r=0.986$)이다.

참고로 김종필후보의 연고지를 충청남도과 충청북도라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충청남도를 연고지로 가정했을 경우(0.973) 보다 상관계수가 0.926으로 낮았다. “충남출신의 김종필후보가 김대중후보를 누른 것은 이지역(충청북도)의 호남에 대한 배타성에 힘입은 것이긴 하나, 그 차의 근소함은 같은 충청도라 하더라도 남·북간에는 큰 연대감이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투표직후의 여론을 분석한 언론(조선일보, 1987. 12. 19일자)의 지적처럼 충청남북도간에는 연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증거하고 있다.

표 1: 노태우후보의 득표율과 연고지출신인구 관련 회귀분석(연고지: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의 시부 및 군부)

변 수	b	beta
출 생 지	-0.232	-0.362
5년전 거주지	0.835	0.994

상수: 30.634; R^2 : 0.415; F: 6.739($<p=0.01$)

표 2: 김영삼후보의 득표율과 연고지출신인구 관련 회귀분석(연고지: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의 시부 및 군부)

변 수	b	beta
출 생 지	0.155	0.280
5년전 거주지	0.341	0.472

상수: 17.640; R^2 : 0.558; F: 11.989($<p=0.01$)

표 3: 김대중후보의 득표율과 연고지출신인구 관련 회귀분석(연고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시부 및 군부)

변 수	b	beta
출 생 지	0.602	0.703
5년전 거주지	0.352	0.289

상수: 6.285; R^2 : 0.974; F: 358.570($<p=0.01$)

표 4: 김종필후보의 득표율과 연고지출신인구 관련 회귀분석(연고지: 충청남도의 시부 및 군부)

변 수	b	beta
출 생 지	0.105	0.279
5년전 거주지	0.405	0.775

상수: 2.237; R^2 : 0.973; F: 354.361($<p=0.01$)

회귀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정계수로 살펴본 연관성은 김대중후보의 경우(0.974)가 가장 높고, 그 다음 김종필후보(0.973), 김영삼후보(0.588), 노태우후보(0.415)의 순서이다. 김영삼후보와 노태우후보의 경우가 김대중, 김종필후보의 경우 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은 무엇보다 이른바 경상도지역에서 두후보를 배설했기 때문에 경상도표의 산표현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김영삼후보의 경우, 결정계수가 낮음은 연고지역 출신인구라는 변수가 아닌 다른 사회변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노태우후보의 경우는 집권여당후보라는 인접이 유효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영삼후보의 경우는 “젊은 아파트주민이 많은 과천시에선 김영삼후보가(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두. 이는 중산층의식을 가진 유권자층의 지향점을 말해 준다”는 언론의 보도(조선일보, 1987. 12. 19일자) 대로 중산층 지지라는 사회변수가 있었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후보가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인 것은 그 지지기반이 크게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 판단된다. 전라도지역 거주

또는 연고인구가 가진 내집단선호의 지역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이 요소가 결정적으로 김후보의 득표로 연결된 것이다.

둘째, 김대중후보의 경우는 ‘출생지’ 변수가 상대적 중요성을 가진 데 견주어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는 ‘5년전 거주지’ 변수가 상대적 중요성을 갖거나 아니면 ‘5년전 거주지’ 변수만이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김대중후보는 ‘출생지’ 변수, 나머지 후보들은 ‘5년전 거주지’ 변수와 보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 사실은 지역감정의 실체에 대한 두가지 설명의 틀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후보의 경우, 출생지변수가 중요변수로 부각된 것은 지역감정이 세대에간에 교육되고, 게다가 다음 세대에서 지역감정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김혜숙(1988)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5년전 거주지’ 변수가 중요변수인 것은 앞서 소개한 송복(1988)의 입론, 곧 지역감정은 최근의 인구이동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이 방증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에 견주어 ‘출생지’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한 김대중후보의 경우는 그만큼 지역연고기반이 훨씬 뿌리 깊은 것임을 시사한다.

5. 맺는 말

경향면분석이 보여준 대통령후보별 유효득표율은 주요경합자(노태우, 김영삼, 김대중후보)의 지지기반이 국토의 중간을 관통하는 남북축에서 좌우로 양분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노태우후보와 김영삼후보는 남북축의 동쪽에, 김대중후보는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에 의해 좌우됐다는 세론이 경향면분석의 지도화작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후보의 유효득표율은 또한 후보자의 연고지역 출신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고지역인구는 ‘출생지’ 인구와 ‘5년전 거주지’ 인구를 말하는데 김대중후보의 경우는 유효득표율이 ‘출생지’ 인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머지 후보들은 ‘5년전 거주지’ 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모든 후보들의 지지기반이 연고지역의 지역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공통되나 ‘출생지’ 인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김대중후보의 지역적 기반이 역사적으로 뿌리깊다고 판단된다.

위의 연구결과는 이 시대의 한국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의 확인이지만 외국의 유사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시말해 외국의 선거양상에서는 유례가 없는 지역의식에 좌우된 투표행태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마치 봉건영주처럼 여야당의 정치지도자들이 기반지역을 나누어 갖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일컬어 ‘사국시대’ 또는 ‘신삼국시대’라는 말이 나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지역감정은 다반사로 폭력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접에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쌓여 온 지역감정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우나 악화시키기는 용이하다는 점에서 ‘망국병’이란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동질적인 지역을 바탕으로 생겨난 집단적 적대감이고, 또 개발정책의 지역격차에 의해 심화된 것이 지역감정이란 점에서 이의 완화는 국토개발정책 또는 지역개발정책 같은 공간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균형개발의 미덕을 강조하면서 상대적 낙후지역에 투자 우선 순위를 제고하라는 국토개발분야의 정책건의는 정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인구이동의 결과,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갑작스런 접촉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 갑작스러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마음의 장벽이 생기면서 지역감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참고가 된다. 타지역 인구유출이 많았던 전라도 사람이 중요 지역감정의 대상이 되었고, 거꾸로 연고지역 안에서 취업기회가 많았던 경상도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경향이 적었는데 그건 “부산과 대구 등의 산업지대에서 지역이동의 물결을 막아줌으로써” 가능했다는 가설(송복, 1988)도 음미해 볼만한 내용이다.

이 가설이 현실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을지는 논의로 치더라도 가설이 설정하고 있는 논리는 정통적인 지역개발이론의 고전적 시각이기도 하다. 지역개발의 이론수준은 사람들이 취업기회를 갖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취업기회를 귀속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연고지역에서 가질 때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이른바 공간적 현실주의(spatial realism)시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직장이 있는 곳으로’(people to job)라는 지역정책 보다는 ‘직장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job to people)의 정책이 개발의 궁극 대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결코 공간적 정책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지역감정의 문제에서 지역은 문제의 준거는 되지만 문제의 실체는 공간위에 자리잡은 비공간적인, 곧 사회적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견으로 공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오히려 사회문제인 지역감정은 그 해결에 비공간적(aspacial)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간에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학계에서는 물론 국회가 지역감정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각적인 처방을 모색하고 있다. 제시된 처방에는 이력서의 본적지 기재란 삭제같은 대안도⁽⁶⁾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처방 제시에 회의적인 견해가 있음이 주목된다. 지역감정같은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서 표준어 사용 권장이나 이력서의 본적지 기재란 삭제같은 예외적인 방법은 해결보다는 현상유지적인 효과가 고작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6) 집권여당은 정부기관에서 이를 먼저 실천할 것을 건의했다(동아일보, 1989.2.11일자).

것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흑인차별을 극복한 미국의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데 미국의 흑인차별정책의 해소책은 기본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감정의 해소책은 “사회적, 제도적 차별에 항거하는 민간단체의 사회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으로 곧 법적으로 차별을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제의도 있다(김진국, 1988).

지역감정의 해소는 각계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성급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오래 쌓이고 쌓인 우리 사회의 삶의 방식인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해소책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하나 분명한 일이 있다. 지역감정은 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감정은 사람이 지닌 문제라는 사실이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감정의 주인인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길승흠, 김광웅, 안병만(1987), 「한국선거론」, 다산출판사.
- 김성준(1986),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지역적 경향분석”, 「지리교육논집」, 제19집, pp.71-90.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88년도 춘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79-101.
- 김형국(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박영사, pp.293-309.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 한국심리학회 88년도 춘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pp.37-62.
- 송 복(1988), “지역갈등의 구조적 요인—지역이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와 민주화」, 한국정치학회편, 범문사.
- 이진욱(1986), 투표행태의 지리학적 연구—우리나라의 8대, 10대,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천주(1986), 「투표참여와 정치발전 : 속 우리나라의 선거실태」, 서울대학교 출판부.
- 경제기획원, 인구조사통계 : 1985.
- 조선일보사, 제13대 대통령선거 자료집, 1988.
- Andrew, G.(1973), “The Linkage between Urban Policy Outputs and Voting Behavior: New York and Lond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4, pp. 341-361.
- Archer, J.C. and F. Shelly(1986), *American Electoral Mosaic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Berelson B., P. Lazarsfeld and W. McPhee(1954), *Voting*, Chicago: Univ. of Chicago

- Press.
- Bunge, W.(1966), "Gerrymandering, Geography and Grouping", *Geographical Review*, Vol. 56, No. 2, pp.256-263.
- Busteed, M.A.(1975), *Geography and Voting Behavior*, Oxford: Oxford Univ. Press.
- Cox, K.(1970), "Residential Relocation and Political Behavior: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Test", *Acta Sociologica* 13, pp.40-53.
- Glen, T.B.(1972), "Changing Electoral Practices in England, 1885-1984",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11, No. 3, pp.297-311.
- Gudgin, G. and P. Taylor(1974), "Electoral Bias and The Distribution of Party Voter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Transactions* 63, pp.48-52.
- Johnston, R.J.(1974), "Local Effects in Voting at a Local Election", *Annals of A.A.G.*, Vol. 9, No. 3, pp.418-429.
- Kelly, Richard(1985), "Independent Voting Behavior and Its Effects on Rational Social Choic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8, No. 3, pp.377-387.
- Kim, Hyung-Kook(1974), "The Impact of Economic Development on an Inter-Urban Hierarchy and Its Implicit Influence on a National Political Integration with Reference to the Case of Korea", 「국토계획」, 제 9권 22호.
- Kim, Jae-On and B.C. Koh(1972), "Electoral Behavior and Social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 Aggregate Data Analysis of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34, No. 3.
- Klimasewski, T.(1973), "Analysis of Spatial Voting Patterns", *Journal of Geography*, Vol. 3, No. 3, pp.26-32.
- Kliot, N.(1982), "Recent Themes in Political Geography",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Nr. 5, pp.270-279.
- Kory, W.(1972), "Political Significance of Population: A Pittsburgh Example", *Professional Geographer*, Vol. 24, pp.118-123.
- Kwon, Tai-Joon(1987), "Regionalism as a New Motif for Regional Planning", 「환경논총」, 제20권 pp.45-59.
- Malmberg, Torsten(1980), *Human Territoriality*,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Muir, Richard and R. Paddison(1981), *Politics, Geography and Behavior*, London: Methuen.
- Odum, Howard W. and H. Moore(1938), *American Regionalism: A Cultural-Historical Approach to National Integration*, Henry Holt and Co.

- Prescott, J.R.V.(1959), "The Function and Method of Electoral Geography", *Annals of A.A.G.*, Vol. 49, pp.296-304.
- Putnam, R.(1966), "Political Attitudes and the Local Commun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0, pp.640-654.
- Rumley, Dennis(1981), "Spatial Structural Effects in Voting Behavior: Description and Explanation", *Tijdschrift voor Econ. en Soc. Geografie*, Nr. 4.
- Swanger, John(1980), "Regionalism in the 1976 Presidential Election", *Geographical Review*, Vol. 70, No. 2, pp.157-166.
- Taylor, P.J. and R.J. Johnston(1979), *Geography of Elections*, New York: Penguin.